

2021년

8월 17일 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 취득 시 세대별 1,000m² 미만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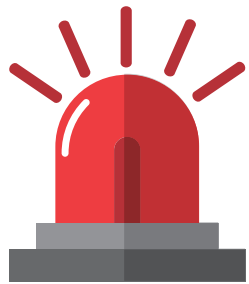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취득이 제한**됩니다.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허용	허용



변경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취득제한	허용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해산명령청구요건 해당 농업법인

- ☒ 조합원이 5명 미만인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 ☒ 비농업인 출자 비율 한도(90%)를 초과한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 ☒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 ☒ 1년 이상 미운영
- ☒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상황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기준가격의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 또한,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기존	
부과 기준	공시지가의 20%
부과 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변경	
부과 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부과 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신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변경	
불법 취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취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

- 농지를 불법 임대, 위탁경영한 경우에 대한 벌금이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취득 등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됩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